

주간 통일정세

2015-07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조평통 “남한, 미국 추종하면 보복타격 대상”(2/11, 조선중앙통신)
 - 조평통은 11일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조미(북미)대결전에 부나비처럼 뛰어든다면 남조선도 미국과 함께 공멸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성명은 남측이 미국과 매일 ‘북침전쟁모의관’을 벌여놓고 ‘북침전쟁의 하수인·돌격대’로 나서고 있다고 비난하며 “남조선 호전광들이 미국 북침전쟁의 대포밥으로 나선다면 우리의 보복타격의 과녁이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힘.
 - 성명은 또 남측이 남북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친미 괴뢰들과 열백번 마주앉는다 해도 해결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비난함.
- 북한 “국보법, 남북화해 장애물…철폐해야”(2/12, 연합뉴스)
 - 북한은 12일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담화는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합법적인 정당’을 해산시키고 “공화국(북한)의 현실을 본 그대로 말하였다고 하여 중북으로 몰아 체포구속하고 강제추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보안법을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개악하려 하는 현 괴뢰패당이야말로 유신 파쇼악당을 능가하는 희세의 인권유린 왕초”라며 “괴뢰패당은 인권이란 말을 입에 담을 체면도 없다”고 덧붙였다고 뉴스는 전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조선신보 “남북 상부상조가 살 길…5·24 해제해야”(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9일 ‘메아리’ 코너에서 “주변 나라들이 활발히 경제교류를 하고 관광으로 오가고 있는데 동족이 어찌하여 이렇게도 불편하게 지내야 하는가”라며 “박근혜 정권이 통일을 원한다면 우선 5·24 조치부터 철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함.
 - 신문은 “김정은 원수님의 신년사에는 원산-금강산 일대를 비롯한 관광개발지구 사업을 잘 밀고 나갈 데 대한 언급이 있다”며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있음을 시사함.

- 북한 “남한 대화 타령은 말장난…모순된 행동”(2/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대결광들의 대화 타령은 말장난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은 남조선 당국이 동족대결 의식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의 중대제안에 대해 ‘전제조건’이니 뭐니 하며 시비하며 대화부터 열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수작”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전제조건이 정당한 요구라고 신문은 강조함.

- 북한 “남한, 남북대화 하려면 미국 추종 탈피하라”(2/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대미 추종은 대화 실현의 엄중한 장애’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이 말로만 ‘대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대화가 열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함.
 - 신문은 이어 “그 기본이 바로 미국의 손탁(손아귀)에서 벗어나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 입장에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다름 아닌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소동과 거기에 적극 추종하는 남조선 괴뢰당국의 민족반역 책동에 있다”고 비난함.

- 북한, 이완구 자질 논란 비난…정부 “유감”(2/11,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1일 ‘총리 후보로 된 부패왕초’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완구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열거하며 남한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며 “남조선 정객들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인민의 의사와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하나의 부귀향락과 돈벌이에 미쳐돌아가는 부패한 인간들"이라고 주장함.

- 또 신문은 '시정배의 과렴치한 거짓말 장사'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최근 회고록에서 남북 비사를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물', '저능아', '산 송장' 같은 극히 거친 말로 매도함.
- 이에 대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사회 내부의 문제"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북한, '대북전단 제한 불가' 인권위 결정 비난(2/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논평에서 "괴뢰인권위원회가 반공화국 뼈라 살포 저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결정까지 공공연히 채택하는 망동을 부렸다"고 주장함.
- 중앙통신은 또 남북 대화를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주문한 데 대해서도 "결과 속이 다른 양면주의적 태도"라고 논평함.

■ 북한, 남한 군사훈련에 "무자비한 징벌" 위협(2/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논평에서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둬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에 계속 추종하며 군사적 대결의 길로 한사코 나간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
- 신문은 "괴뢰당국은 우리와의 최후 결판에 나섰다가 비참한 종말을 고하든지 아니면 군사적 도발을 전면 중지하고 동족끼리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든지 두 길 중 한 길을 택해야 한다"고 덧붙임.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악화하는 남북관계”…북한, 한적 분유 지원 거부(2/11, 연합뉴스)
 - 대한적십자사가 11일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분유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북한 어린이 지원을 위해 25t의 분유를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판문점 연락채널에 전달했지만 북측 적십자사는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뉴스는 전함.

- 남한 '채널A' 방송사 보도(2.5, '6·25 당시 美 세균탄 사용' 北 주장은 '세뇌교육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있음')에 대해 “어용나팔수들의 쓸개빠진 추태” 등으로 비난 지속(2.9, 평양방송)
- 채널A 방송사 보도(6.25때 美 세균탄 사용 주장은 세뇌교육용) 관련 ‘상전의 환심을 사보자는 속심’이라며 ‘미국의 총건이 되어 무분별한 동족대결책동에 계속 미쳐 날뛰다면 수치스러운 파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위협(2.10,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근 韓美의 “반공화국 압살모의”를 주장하며 ‘미국의 反北정책에 편승하여 우리(北)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과 아무리 마주앉아 대화를 해댔자 시간낭비라는 것이 우리가 얻은 결론’이라며 “남조선 당국의 망동이 어떤 비참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2.12, 중앙통신·민주조선)
- ‘남북대화 및 관계개선’ 관련 재차 ‘미국의 손 탁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 허심탄회하게 풀어나갈 용단을 내려야 한다’며 ‘실천적 조치 없는 대화타령은 여론기만을 노린 미사여구’라고 주장(2.13, 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주민 동원해 미국 비난...“멸망의 쓴맛 볼 것” (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에 접한 천만군민의 분노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결전’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발언을 소개함.
 - 조선인민군 군관 리천금은 미국이 ‘북 붕괴’ 망상에 사로잡혀 ‘초강도 추가제재’니, ‘합동군사연습’이니 하고 있다며 “조선인민군과 감히 맞섰다가 종당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악의 제국 미국을 세계는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같은 면의 ‘미국과 더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에서도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혁명 무력의 입장”이라고 위협함.
- 북한, 일본 정찰위성 비난...“침략 야욕 드러나”(2/10, 노동신문)

노동신문은 10일 ‘재침열에 뜬 머리를 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나라와 그 주변 지역을 정밀감시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해외침략 준비책동의 한 고리”라고 주장함.

신문은 또 지난달 한미일 3국이 체결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도 일본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편승해 한반도에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다. 회담 관련

- 미 핵과학자회보 “2010년 5월 북한 핵실험 있었다”(2/14, 연합뉴스)
 - 마이클 쇼프너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원과 울리히 쿤 독일 함부르크대 연구원은 최근 미국 핵과학자 회보에 게시한 글에서 “올 1월 발행된 지진파 분석결과는 2010년 5월 핵실험이 있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북한이 2010년 5월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중국과학기술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지구물리학 국제학술지 '지진학연구소식'에 게재된 논문에서 “북한이 2010년 5월12일 소규모 핵실험을 한 사실을 ‘미진(微震)검측 방식’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며 2012년 4월 스웨덴 국방연구소 대기과학자 에릭 라스 데 예르는 세계적 권위의 군사과학저널 ‘과학과 세계안보’에 게재된 논문에서 “한국·일본·러시아의 핵물질 감시 관측소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집한 한반도 상공의 대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2010년 4월과 5월 두 차례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이 공식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2010년 5월 통상적인 핵분열 실험이 아니라 핵융합 방식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라. 대미국

- 북한군, 반미 결의대회…황병서 “미제에 불벼락”(2/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가 13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결의대회 연설자로 나섰다”고 밝힘.
 - 황 총정치국장은 “인민군대는 침략과 도발의 원흉, 강도의 무리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0.001mm라도 침해하고 건드린다면 가장 무자비하고 무서운 불벼락을 들뜨울 것”이라고 위협함.
 - 황 총정치국장의 연설에 이어 김영복 육군 제11군단장, 허상문 해군 부사령관,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결의 토론을 했다고 통신은 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일, 지난달 중국서 납치문제 비공식 협의”(2/12,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관해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비공식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 통신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함.
 -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측이 협의에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참석시켰다고 전했으며 교도 통신은 북한에서는 특별조사위 산하 납치문제 분과의 책임자인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국장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도함.
 - 일본 측은 납치피해자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거듭 요구했지만, 북한 측이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진 않았으며 다만 일본 측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직접 연결된 조직인 점에서 이번 협의를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함.

사. 대러시아

- 북한 리수용 “올해 북러관계 전면적 발전 기대”(2/9, 조선중앙통신)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9일 러시아에 보낸 축전에서 올해 북러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축전에서 리 외무상은 “올해에 조로(북러)관계가 최고수뇌분들 사이에 이룩된

공동 인식과 국가간 조약의 정신에 맞게 전면적으로, 획기적으로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올해가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15주년뿐 아니라 광복 70주년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이 겹치는 북러관계의 뜻 깊은 해라고 강조함.

- 북러 기업협의회장 “북한 인프라·관광사업 유망”(2/12, 미국의소리)
 - 북러 기업협의회 회장이 북한의 기간시설과 관광사업을 투자 유망한 분야로 꼽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북러 기업협의회는 양국 민간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한 협의체로 무역·투자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수르빌로 회장은 현재 양국이 진행 중인 북한 내 철도보수 공사에 협의회 지원이 필요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주북 러 대사 “김정은·푸틴 정기적 메시지 교환”(2/12, 이타르통신,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12일 이타르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두 나라가 최고위급과 고위급 정치 대화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함.
 - 마체고라 대사는 러시아가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들 3개국을 잇는 전기·천연가스 공급 사업과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참여 등을 사례로 꼽았으며 특히 "러시아 자본과 상품이 북한 광물자원에 투입되는 형식의 교역과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 최태복 의장, 올해 러시아 방문”(2/13, 러시아의소리)
 - 러시아의소리 방송은 13일 러시아 의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최고인민회의의 최태복 의장이 올해 안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함.
 - 이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기념 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으며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 의장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양국이 협의 중이라고 방송은 덧붙였다.

- “북한 리룡남 대외경제상 24일 모스크바 방문”(2/14, 미국의소리)
 - 북한의 대외 경협을 총괄하는 리룡남 대외경제상이 오는 24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극동개발부는 최근 리 대외경제상의 구체적인 방러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은 채 그의 모스크바 방문에 맞춰 북한-러시아 기업협의회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리룡남 대외경제상의 이번 방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계기가 될 것이라고 VOA는 전망함.

아. 국제기구

- 북한, '미국 비난' 국방위 성명 안보리 공식문건 배포(2/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대미 강경 입장을 천명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자. 기타 국가

- 북한, 인도네시아에 북한인권 심포지엄 항의(2/11, 템포)
 -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인터넷판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대해 북한이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함.
 - 대변인은 북한의 항의 서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는 민주국가로서 이미 법적 승인을 받은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고 템포는 덧붙임.
- 북한 대표단, 싱가포르서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2/12, 자유아시아방송)
 - 동남아를 순방 중인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은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마사고스 즐기프리 외무·내무 담당 선임국무장관을 예방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방송은 전함.

- 美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의 50개 사법·경찰기관의 레이저 장비 이용, 개인주택 사람감시’ 보도 (1.20, USA투데이) 관련 이는 “반인권범죄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위반)”로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왕국, 반인륜범죄국가”라고 주장(2.9, 중앙통신)
- 駐北 러 대사, 2월 10일 ‘외교 일꾼절’(외교관의 날) 즈음 궁석웅(외무성 부상)·김진범(대외문화연락 위 부위원장) 등을 초대한 가운데 연회 마련(2.10, 중앙통신)
- 駐 알제리 北대사 최혁철, 2월 2일 同國 민족해방전선당 총비서 의례 방문(2.10, 중앙방송)
- 주북 이란 대사, 2월 11일 ‘이슬람교 혁명승리’ 36주년을 즈음하여 리수용(외무상)·정영수(노동상) 등을 초대한 가운데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마련(2.11,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2.16)과 설명절을 즈음하여 주북 몽골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2월 11일 평양시 창덕학교에서 진행(2.11, 중앙통신)
- 일본의 패전 70주년을 맞아 아베 총리가 새로운 ‘아베 담화’(우라야마 담화의 식민지통치와 침략, 사죄 등 삭제)를 발표하는 것은 ‘일본에 의해 뼈아픈 상처를 입은 조선민족은 물론 피해국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우롱’이라고 비난(2.11, 중앙통신·민주조선)
- 美 국방부 부장관 강연(‘러·중 위협에 대처 나토 회원국들의 신형 무기개발에 투자 및 미국의 무력강화’ 강조)은 “국제무대에서 군사적 패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러·중 역시 군사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힘의 대결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고 주장(2.12, 중앙통신·노동신문)
- ‘이란이슬람교 혁명승리(2.11)’ 36주년 관련 이란의 ‘반제자주 및 핵기술개발, 경제·국방력강화’ 지지 표명 및 ‘北-이란 친선협조 발전’ 강조 (2.12, 중앙방송·노동신문)
- 美 국가안보전략보고서(집단적 행동의 우월성과 다자주의적 협조를 제창)
- 발표 관련 ‘군사적 힘 쇠퇴, 재정원천 고갈에서 오는 현실인정’이라며 ‘동맹세력을 규합하여 경쟁대상들을 제압하기 위한 목표를 둔 세계제패 야망의 발로’라고 비난(2.13, 중앙통신)
- 남북대화를 강조한 대통령의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 발언(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北의 도발 억제)을 거론하며 ‘겉과 속이 다른 양면주의적 태도’라고 비난하고 ‘南 당국은 올해에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는 우리(北)의 진정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2.14, 중앙통신 논평)
- ‘중북콘서트’ 황선 氏 구속과 재미동포 신은미 氏 강제추방 등은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라며 ‘南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운동 탄압 망동을 무조건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2.14, 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정부의 ‘北 「조평통」 특별성명’ 유감표명(北, 왜곡되고 일방적인 위협 등)에 대해 “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미국 본토는 물론 침략자들이 배겨있는 모든 본거지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타격으로 목사발을 만들 것”이라고 위협 지속(2.15, 중앙통신·민주조선)
- 남한 ‘채널 A’ 방송 보도(‘北의 미군 세균탄 사용 주장은 세뇌교육으로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있음’)를 “역겨운 흑백전도의 궤변, 더러운 상전비호나발”이라고 비난 지속(2.15, 중앙통신 논평)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원산시 고아원 건설현장 시찰(2/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강원도 원산시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한광상 당 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김정관 중장이 영접했다고 통신은 전함.
 - 건설현장을 둘러본 김 黨 제1비서는 “모든 원아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며 육아·애육원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15일까지, 초등·중등학교는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7월27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국방부 “김정은, 군부대 돌며 싸움준비 완성 독려”(2/11, 연합뉴스)
 - 국방부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한 업무 자료를 통해 “김정은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동계훈련 기간에 총 30회의 공개활동 중 군부대를 10회 방문했다”면서 “올해 싸움 준비를 완성하라고 독려하면서 체제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특히 북한군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고사총을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전진 배치하고 조작 훈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함

- 북한 김정은, 건설자들과 기념사진 찍으며 격려(2/12,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동지께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우는(건설하는)데서 노력적 위훈을 세운 8건설국 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전함.
 - 김 黨 제1비서는 촬영을 마치고 건설자들이 “당의 건설구상을 실현하는 길에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다”며 “선군시대의 영웅이고 우리 당의 보배”라고 치하했으며 이날 촬영에는 한광상 당 부장과 김용수·리문곤 당 부부장이 함께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 김정은, 전용기 타고 건설현장 시찰(2/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전용기를 타고 평양의 대규모 주택단지인 ‘미래과학자거리’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한광상 당 부장이 동행했고, 건설 현장에서는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김정관 중장이 영접함.
 - 중앙통신은 6개월 전 착공 이후 현재 1단계 건설 공사가 85% 수준에 도달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15일)까지 완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다. 공식 행사

- 북한, 창당 광복 70주년 경축 ‘첨단무장장비’ 개발(2/13,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정치국이 10일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돌과 조국해방 일흔돌을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강성 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 대경사로 맞이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이번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은 “우주를 정복한 정신, 기백으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자”고 결정했으며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미제의 반공화국 전쟁책동과 핵, 인권 모략 소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키자”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인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특히 “농업생산에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평양국제비행장 2청사,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단계 공사, 김일성종합대학 3호 교사, 중앙동물원,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개축공사 등 중요 건설사업을 정해진 날짜까지 무조건 끝낼 것도 주문함.

- 북한, '김정일 생일' 띄우기...명절 분위기 고조(2/13,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김정일 위원장이 태어난 곳으로 선전하는 백두산 밀영에서 12일 '백두산 밀영 결의대회'가 열렸으며 연설자로 나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김 위원장이 후손을 위해 '강위력한 정치 군사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치켜세우고 '백두산 혈통'을 이어받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함.
 - 노동신문도 이날 2면을 김 위원장의 생전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 도배했으며 나머지 지면도 삼지연 얼음조각 축전, 웅변모임, '김정일화' 전시회 등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소식으로 채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광명성절'을 사흘 앞두고 다양한 자축 행사를 열며 명절 분위기를 고조시킴.
- “북한, 올해도 '아리랑' 공연 취소...에볼라 탓인 듯”(2/13, NK뉴스)
 - NK뉴스는 13일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 예정된 아리랑 공연 계획을 공식 취소했다"고 전함.
 - 뉴스는 북한이 에볼라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아리랑 공연 계획 취소도 이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함.
- 북한, 김정일 생일 보고대회...김정은에 충성 다짐(2/15,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하루 앞둔 15일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다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영도, 덕망을 그대로 이으신 또 한 분의 백두산형 위인이신 김정은 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강성국가의 영마루(맨 꼭대기)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함.
 - 이날 대회에는 호명된 최룡해 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당 비서를 비롯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박도춘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당 비서,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양건·김평해·곽범기·오수용 당 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등이 주석단에 자리했다고 뉴스는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김정은과 기념사진 찍으세요”…북한의 민심장악 방법(2/9,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9일 ‘누구나 그이 곁에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원수님과 병사들, 우리 원수님과 인민들은 한 핏줄을 이은 한 식솔이고 떨어질 수 없는 혈연의 동지들”이라고 선전하며 지난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시찰, 창전거리 가정집 방문, 올해 2월 전투비행사 표창휴가 축하 면담 등 김 제1위원장이 수시로 행하는 각종 시찰에서 일반 노동자 및 하급 군인들과 찍은 기념사진들 게재함.
 - 김 黨 제1비서는 각종 공장이나 군부대 등을 시찰하며 일반 인민들을 만날 때면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한 기념사진을 통해 친근하고 격의 없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김 제1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통치권을 넘겨받아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기반을 보완하는 일종의 ‘민심 결집용 수단’으로 풀이된다고 연뉴스는 전함.

- 「광명성절(2.16, 김정일 생일)」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 2월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김기남(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박춘남(문화상/ 개막사) 등 참석한 가운데 진행(2.9, 중앙통신·중앙방송)
- 9.22건설돌격대원들, 2월 9일 곽범기(黨 비서)·리경식(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중앙현장지휘부 부책임자) 등 참가한 가운데 ‘김정은 저작(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과업 관철’ 쫄기모임 진행(2.10, 중앙방송)

- ‘정규군’ 창설(‘48.2.8) 67주년 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2월 9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2.9,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2.16, 광명성절)을 맞아 전국요리기술경연, 2월 10일과 11일 평양면옥에서 진행(2.11, 중앙통신)
- 노동당 중앙위원회·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국해방 70돌과 당창건 70돌’을 즈음한 ‘공동구호’ 발표(2.12, 중앙통신·중앙방송)
- 「광명성절(2.16, 김정일 생일)」 즈음 ‘백두산밀영결의대회(‘김정일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김정은 영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 2월 12일 진행(2.12,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2월 13일 故 유기항(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부장 겸 강사, 조선인민군 장령) 빈소에 화환 전달(2.13, 중앙통신·중앙방송)
- 黨 중앙위·중앙군사위 공동구호 관련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천 강령’이라며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에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승리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2.13,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에 선물(현대적인 설비들) 전달(2.14, 중앙통신)
- 北, 글작품집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출판(2.14, 중앙통신)
- 김정일 생일(2.16, 광명성절) 7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2월 15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2.15, 중앙방송·중앙통신)
- 北,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과 무관하다”며 이는 ‘미국의 反北 모략소동 산물’로 “우리에게는 저들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활용하려 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미국을 “세계최대의 사이버테러국”이라고 비난(2.15, 중앙통신·민주조선)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북한, 네팔 공사장에 폭발전문가 54명 불법파견”(2/11, 자유아시아방송, 안나푸르나포스트)
 - 북한이 건설 노동자 54명을 네팔 공사장에 불법 파견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현지 일간지 안나푸르나포스트를 인용해 전함.

- 안나푸르나포스트에 따르면 1월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 54명은 현재 북부 산간 신두팔축 지역에서 수력발전소용 터널 발파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민군 북무시 폭발물을 이용해 발파작업을 했던 폭발 전문가들로 북한의 노동자 해외파견 전문업체와 네팔 현지 업체 사이의 계약을 통해 공사장에 취업했다고 함.
- “북한, 2013년 8월 15일에 경제개혁 조치”(2/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경제강국건설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다/광명성절경축 사협 연구토론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3년 8월 15일에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 이미 도입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로 정식화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데 대한 방침이 제시됐다”라며 경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부각함.
 - 조선신보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대해 “기업이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사회주의 분배를 옹계 시행해 노동 의욕을 높임으로써 기업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이 2013년 8월 15일 새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조치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업 분조 단위를 줄이고 농산물의 개인처분권을 보장한 6·28 조치와 이를 확대·강화한 5·30 조치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다. 경제 상황

- “북한 겨울 가뭄으로 올해 식량사정 악화될 듯”(2/9, 워싱턴포스트)
 -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국제구호기구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겨울 가뭄이 심해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함.
 - 존 에일리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 지역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중저부족과 강수 및 적설량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로 인해 올겨울 수확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 “북한, 작년 ‘물고기 대풍’…공급 정상화 속도”(2/9, 조선신보)
 - 지난해 북한의 어획량이 크게 늘면서 평양을 중심으로 주민들에 대한 수산물 공급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함.
 - 이에 따라 평양의 고아원과 양로원 같은 취약계층 시설을 비롯해 ‘중노동 직장’과 의료기관, 노동자 기숙사 등 ‘우선단위’에 대한 물고기 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함.
 - 신문은 수산업 증산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추진 중이라며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지고 있다고 덧붙임.

라. 대외 경제관계

- 북한, 우크라이나서 신형 여객기 도입(2/13, 미국의소리)
 - 북한 유일의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이달 우크라이나에서 신형 여객기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우크라이나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 안토노프는 “북한에 새 여객기 안토노프 'AN-148' 한 대를 인도할 예정”이라며 “지난 1월 말 북한 전문가들이 회사를 방문해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
 - 방송은 고려항공의 낡은 비행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국제기구와 이용객들로부터 제기되면서 북한이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새 여객기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임.

- 3대혁명전시관 중공업관에 마감건재전시장(천리마타일공장 등지에서 100% 국내원료·기술로 생산한 금속·방수액·돌가공제품 등) 새로 조성 및 ‘마감재들 계약합의·주문·위탁판매’ 선전(2.9, 중앙통신)
- 만경대 경흥식료공장(식료품 생산공장) 조업식, 2월 10일 안정수(黨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2.10, 중앙통신)
- 하성다이아(타이어)공장, ‘대형 화물자동차 다이아 생산 공정을 개건하여 자재설비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선전(2.11, 중앙통신)
- 단천제련소(함경남도)에 “조선식의 새로운 유리섬유 및 수지액생산공정” 건설 조업식, 2월 12일 진행(2.12, 중앙통신)
- 개성애국피복공장, 1/4분기 인민경제계획 조기완수(2.14,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스웨덴, 탈북 추정 소년 추방절차 임시중단(2/10, 자유아시아방송)
 - 스웨덴 법원이 송환 위기에 놓인 탈북자 추정 소년에 대한 추방 절차를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2013년 스웨덴에 건너간 17세 소년은 자신이 탈북자라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스웨덴 당국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거절하고 중국 추방 결정을 내렸으며 현지 법률 전문가 등은 재심사를 촉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방송은 전함.
- 중국 접경 북한주민, 北당국과 휴대전화 사용 '숨바꼭질'(2/12,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은 지난 2012년부터 김 黨 제1비서 지시로 접경 지역에서 신호를 추적해 중국 이통사 유심(USIM)을 쓰는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대한 검거를 대폭 강화했지만, 여전히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자국 내 대표적인 탈북 루트로 알려진 함경북도 회령·무산, 양강도 혜산 등지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신호 추적을 집중적으로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휴대전화는 북중 국경 밀무역이나 외부에서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과정에도 자주 사용돼 북한 당국은 일단 불법 통화자가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뉴스는 전함.
 - 한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주민의 중국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북중 국경 지역에 광범위하게 방해전파를 쏘는 것인데 중국 이통사와

가입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고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탓에 북한 내 중대사태 발생시기나 한반도 긴장 고조시기 위주로 방해전파를 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스는 보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태권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시범단 파견(2/9, 미국의소리)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선수들이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시범단을 파견한다고 9일 보도함.
 - 이번 대회는 한국 주도의 세계태권도연맹(WTF)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북한 선수들을 비롯한 국제태권도연맹(ITF) 인사가 참가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짐.
 - 대회에 남북 태권도가 공동 참가하는 것은 작년 8월 장 총재와 조 총재가 중국 난징에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 체결한 의향서 집행의 실천적 조치라고 방송은 전함.
- 북한, TV·라디오 HD방송으로 완전 전환(2/9, 연합뉴스)
 - 북한이 9일부터 TV와 라디오 방송을 HD(고화질)로 완전 전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그동안 SD(표준화질)와 HD를 겸용해 송출하던 조선중앙TV와 위성 조선중앙방송(라디오)을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모두 HD 단독 송출 방식으로 바꿨으나 전날 자정까지도 영화나 주요 행사 방송 등 실제 콘텐츠는 SD급에 머물러 있어 고화질·고음질이 특징인 HD방송의 효과를 100% 나타내지는 못했다고 뉴스는 전함.

- 북한 대동강맥주공장, 막걸리도 생산…주민들에 인기(2/10, 조선중앙통신)
 - 외국에서도 호평을 받는 북한의 ‘대동강맥주’를 생산하는 공장이 막걸리도 만들어 주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문수각, 평양면옥, 연못각 등 평양 시내 유명 식당에 공급되는 막걸리가 대동강맥주공장에서 “공업적 방법으로” 생산된 것이라고 소개함.

- 북한, 스포츠화 디자인 경쟁 나서…“국산품 사랑”(2/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누구나가 다 찾는 국산신발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스포츠화 전문 제작 공장인 류원신발공장에 미술대 졸업생들을 배치하고 국산자재의 질 향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김 黨 제1비서가 지난 1월 이 공장 시찰했을 때 형편없는 재질과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으로 인해 외국제품과 비교되는 신발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다음날 신발생산과 관련되는 내각의 성 및 중앙기관 간부들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과학자·기술자들이 이 공장에 나와 개선작업에 나섰다고 전함.

- “북한 학생들도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학습 즐긴다”(2/15, 연합뉴스, 교육신문)
 - 북한이 태플릿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학습의 대중화를 독려하며 세계적 '스마트 교육' 추세를 따라가려고 노력중이라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주간지 교육신문 최신호는 '손전화기에 의한 이동 원격학습체계의 특징'이라는 글에서 "손전화기 이동학습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원격교육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강조했으며 글은 스마트폰 앱은 필요할 때 즉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Just-in-Time'(적시) 학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교육을 독려함.

- 北 요리협회 서재요리정보기술교류사, 인터넷 홈페이지 ‘조선요리’ 신설(2.10, 중앙통신)
-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도서관과 함흥의학대학 도서관 준공식, 2월 10일과 11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2.11, 중앙통신)
- 조선요리협회, “음식감들에 알맞은 가공법과 건강에 좋은 음식 조리법” 등이 편집된 圖書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콩음식·건강을 위한 식생활상식·접대원상식’ 발간(2.12,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미국무 장관 “남북대화 진전시 비핵화 나은 환경” (02/09, 연합뉴스)
 - 동북아 순방차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일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북한에 언제든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 또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이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찰된다면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함.
- 미 NSC 부보좌관, 북한에 ‘대화 의지 행동으로’ 강조 (02/09,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의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비핵화는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북한이 인식해야 하며, 북한은 진지한 대화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미국 국무부 역시 이날 정레브리핑을 통해 “신뢰성 있는 협상을 재개하려면 (북한은) 모든 위협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비핵화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전함.
- 존 볼튼 “북핵문제 유일한 해법은 북한 붕괴” (02/14, 연합뉴스)
 -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민간단체 디펜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유일한 장기적 해법은 두 개의 코리아를 병합하는(merge)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함.
 - 그는 북한 핵문제가 중국의 경제성장에도 해를 끼친다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의 대북 식량·에너지 공급이 북한 정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중국의 결단만 있으면 북한을 쉽게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함.

- 미 핵과학자회보 “2010년 5월 북한 핵실험 있었다” (02/14, 연합뉴스)
 - 마이클 쇼프너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원과 울리히 쿤 독일 함부르크대 연구원은 최근 미국 핵과학자 회보에 게시한 글에서 “올 1월 발행된 지진파 분석결과는 2010년 5월 핵실험이 있었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북한이 2010년 5월 핵실험을 했다는 주장은 지난해 11월 중국과학기술대학 연구팀과 2012년 4월 스웨덴 국방연구소 대기과학자 에릭 라스 데 예르 역시 제기한 바 있음.
 -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금까지 세 차례로 집계된 북한의 핵실험 횟수는 물론 핵실험의 형태와 기술진척 수준이 기존 분석과 달라질 수 있어 과장이 예상되나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이 공식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나. 미·북 관계

- 북한, ‘미국 비난’ 국방위 성명 안보리 공식문건 배포 (02/09,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4일 대미 강경 입장을 천명한 성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식문건 ‘S/2015/90 호’로 배포됐다고 밝힘.
 - 북한은 이 성명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미국을 상대로 더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고 상종할 용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미국 전 관리 “리용호 ‘왜 북한만 적대시하나’ 항변” (02/12, 연합뉴스)
 -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리용호 부상과 접촉했던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은 10일(현지시간) 일부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리 부상은 미국이 북한하고만 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함.

- 디트라니 전 소장은 리 부상이 이 자리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리 부상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에 대가로 핵실험과 함께 핵탄두 소형화 노력 중단을 제안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미국 측 참석자들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면 적어도 2005년 9·19공동성명을 이행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디트라니 전 소장은 전함.

다. 중·북 관계

- 중국, 北 미사일 발사에 “관련 뉴스 예의주시” (02/09, 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8일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 뉴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련국 모두가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를 위해 공동으로 힘쓰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북한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에 에둘러 우려를 나타내면서 자제를 촉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 올해 성사될까 (02/10, 연합뉴스)
 - 중국의 정치평론가인 장화이둥(張懷東)은 9일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뒤웨이(多維)에 기고한 글에서 김 제1위원장과 시 주석은 올해 국제 행사에서 3번의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들 기간에 북-중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함.
 - 장화이둥은 두 정상이 조우할 가능성이 높은 국제회의로 오는 4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 회의,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을 기념 열병식을 꼽음.
 - 또한 그는 북-중 관계가 시 주석과 김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핵 문제 등으로 냉랭해졌지만 양국 정상은 국제 행사 공동 참석 등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함.

- 북한-중국 연결 '신두만강대교' 올해 말 개통 (02/11, 연합뉴스)
 - 진춘산(金春山) 훈춘시장은 11일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북한 나선 경제특구로 가는 관문인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나선시 원정리를 잇는 새 교량(일명 신두만강대교)이 올해 말 개통될 것이라고 밝힘.
 - 북·중이 공동 개발 중인 북한 나선 경제특구는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의 대기업 진출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중소제조업 투자와 무역 거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 한편 북한은 중국과의 나선 특구 공동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북일, 지난달 중국서 납치문제 비공식 협의” (02/12, 연합뉴스)
 -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관해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비공식 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도 통신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일본 측은 납치피해자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거듭 요구했지만 북한 측이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진 않았으며, 다만 일본 측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직접 연결된 조직인 점에서 이번 협의를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임.
 - 또한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협의에서 작년 9월 북한이 밝힌 재조사 예상 기간(1년)이 올해 여름이면 완료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번 협의 때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조사 중간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함.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북한 겨울 가뭄으로 올해 식량사정 악화될 듯” <WP> (02/09, 연합뉴스)
 -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7일(현지시간) 국제구호기구 관계자들을 인용해 현재 북한은 약간의 날씨 변화로도 주민들의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빠져있다고 보도함.
 - 존 에일리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 지역 담당 부국장은 북한의 종자 부족과 강수 및 적설량 저하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겨울 수확과 가을 수확 간 간격이 벌어져 비수확철이 연장되면 영양실조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의 랜덜 스페이더니는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곡물량이라기 보다는 단백질과 미량영양소를 주민에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식량의 질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함.

- 북한 “남한, 남북대화 하려면 미국 추종 탈피하라” (02/11, 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대미 추종은 대화 실현의 엄중한 장애’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이 말로만 ‘대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지 행동으로 대화가 열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추종하지 않고 자주적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을 거론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조미(북미)관계는 물론 북남관계마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전에게 항변 한마디 못하고 오히려 맞장구를 치고 있다”고 비판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 “北지도자 어떻게 만날지는 차대통령이 내릴 결정” (02/09, 연합뉴스)
 -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0일 러시아에서 5월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만날지, 또 어떻게 만날지를 선택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밝힘.

- 그는 남북관계 개선이 유익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관여(engage)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핵화 대화가 진행되기에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전함.
- 그는 또 “한·미 양국은 비핵화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은 그런 토대에서 북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불행히도 북한은 그런 관여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함.

■ 블링큰 美부장관 “사드, 北위협 대응목적…결정 안돼” (02/09, 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중인 블링큰 부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의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문제는 매우 분명하다”면서 “사드에 대해서는 결정이 없고 활발한 논의도 없다”고 밝힘.
- 그는 이어 “사드는 순전히 방어적이고 전적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이며 만약 진행된다면 한국과 완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밖에 그는 한일관계와 관련, “한·일 양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면서 양국관계가 가능한 한 강해지길 바란다고 전함.

■ 미국 국방부, 사드 문제 “한국 측과 지속적 협의 중” (02/11, 연합뉴스)

-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전달할만한 내용이 없다”면서 “그러나 사드 미사일 능력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함.
- 커비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공식 협의하지 않고 있다는 양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자 제프 폴 국방부 공보담당관은 연합뉴스에 “현재 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사드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진지하고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함.
- 그러나 폴 담당관은 “우리는 이미 한국 내에서 부지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한국 측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고 전해 미국이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나. 한·중 관계

- “사드 한반도 배치시 한·중관계 훼손” (02/09, 연합뉴스)
 - 리카이성(李開盛) 상하이(上海)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은 9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국이 자국 안보 수호를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는 것은 중국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사드 배치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침.
 - 그는 사드가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대응하려는 것이지만 이 시스템의 적용범위가 2천km 전후란 점에서 북한 탄도 미사일의 방어 수요를 크게 넘어선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하는 대가로 미국의 요구에 응한다면 이는 중·한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최저선(한계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전함.
 - 또한 중·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한국은 어느 한 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의 ‘못 이기는 체하는 태도’ 하에 배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의 한반도 사드 반대, 한미동맹 억제 시도” (02/15, 연합뉴스)
 -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의 사드 도입 문제에 중국이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함.
 -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미동맹을 취약하다고 간주하고 한미동맹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함.

- 김장수, 韓·中 수교 23년만에 첫 軍출신 주중대사 (02/15, 연합뉴스)
 -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신임 주중대사에 내정됨에 따라 지난해 5월

- 안보실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1년도 안 돼 다시 핵심 외교포스트로 복귀할 예정이다.
- 김 내정자가 주중대사에 부임하게 되면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3년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군 출신 인사가 중국대사를 맡게 되며 국방장관을 역임한 인사를 주중 대사로 내정한 것은 중국과의 안보협력이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김 내정자가 국방 분야의 전문가이나 외교 분야에선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어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로 떠오른 중국 대사직 수행 적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日외상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퇴행적 행태” (02/12, 연합뉴스)
 -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상이 12일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시대 한반도 침탈의 역사를 아직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 퇴행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함.
 - 또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하고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 박대통령 “군위안부 문제해결이 한·일관계 개선 첫걸음” (02/13,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뜻 깊게 기념하고 한·일관계의 안정된 미래를 차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핵심 현안으로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함.
 - 박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납득가능한 조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니카이

총무회장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함.

- 이에 니카이 총무회장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 노력에 힘을 합치고 박 대통령의 당부를 충분히 유념하면서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함.

■ “일본 정부,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에 부정적” <아사히> (02/14, 연합뉴스)

-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달 23일 만료하는 한국·일본 간 100억 달러(약 11조 30억원) 규모의 통화스와프(교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계약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고집 싸움이 돼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고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을 발표할 예정임.
-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로 시작됐으며 2011년에는 700억 달러까지 규모가 확대했고 2012년 관계가 악화되면서 130억 달러로 축소됨.

■ 한·일 재무장관회의 5월 말 추진…2년 반 만에 재개 전망 (02/15,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만나 경제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재무대화를 올해 5월 하순 재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지(닛케이)이 보도함.
- 신문은 2001년부터 이어진 한국과 일본 사이의 통화스와프(교환) 계약이 곧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 협력 자체는 이어지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12년 11월을 끝으로 양국 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열리지 못했으며 5월에 열리면 약 2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합의대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일정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힘.

라. 한·러 관계

- 목소리 높이는 중·러…‘한반도 사드’에 견제 강화 (02/11, 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논의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음에도 러시아와 중국은 사드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는 10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아시아-태평양으로 확장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 역시 지난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이후 여러차례 사드 체제 도입을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와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사드 도입에 대한 안보적 위기감 보다는 각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의 대립에서 오는 불만의 표출과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남한으로 돌리면서 한·미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시도로 분석됨.

마. 미·중 관계

- “시진핑, 하반기 미국 첫 국민방문” <주미 중국대사> (02/09, 연합뉴스)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9일 추이텐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가 최근 워싱턴에서 중국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하반기 미국을 국민 방문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 양국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중국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2년 전 두 정상미 미국에서 합의한 양국간 신형대국관계 구축 문제를 포함한 양자 현안과 함께 주요 국제이슈를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미국이 사이버안보 이슈를 비롯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 논의 주제는 서태평양 지역의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 미국 빠지는 아프간서 역할 확대 모색” <WSJ> (02/10, 연합뉴스)
 -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한 고위 미국 관리의 말을 빌려 작년 12월 런던에서 미국, 중국, 아프가니스탄이 처음으로 비공식 회담을 열어 아프간 평화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함.
 - 중국은 2001년 미국의 침공으로 권좌에서 축출되기 전에 탈레반 정부와 외교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무역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런 인연으로 중국은

2002년 이래 탈레반 지도자들과 줄곧 접촉해와 협상 중재에 적임자라는 견해가 존재함.

- 또한 중국은 수십 년간 국내문제에만 치중해온 데서 벗어나 역내 지도자의 위상을 높이고,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치안이 불안해지면 중국 북서부 위구르족 무슬림 지역의 안정도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중국에 '부패관료 송환' 협조 시사 (02/11, 연합뉴스)

- 중국당국이 국외 도피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검거작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미국도 부패관료 등 도피사범 송환에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발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베이징 APEC에서 '베이징 반부패 선언' 등을 통과시켰고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회의기간에 만나 반부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 그러나 미국은 중국 사법체도를 강하게 불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 협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미국서 '줄소송 위기' 알리바바, 중국 당국에 SOS (02/11, 연합뉴스)

-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장은 지난 9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 즈수평(支樹平) 국장과 만나 "위조 상품 판매를 줄이기 위해 거래 자료를 당국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함.
- 마 회장이 당국을 잇따라 찾은 것은 미국에서 전자상거래 업체가 위조 상품 판매와 관련된 소송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면 판매된 상품이 위조 상품인지 몰랐다는 점과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임.
- 그러나 즈 국장이 알리바바가 위조 상품 근절에 나선 여러 정부 부처를 앞장서서 지원하고 협조했다고 치하하며 마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지만, 알리바바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시진핑 방미 7개월 전 발표는 외교상 '파격' (02/12, 연합뉴스)

- 중국 북경청년보(北京青年報)는 12일 시 주석의 9월 미국 방문이 7개월 이전에

발표된 것은 기존의 외교 관례를 깨뜨린 것이라면서 정상외교 관례상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평가함.

- 천밍밍(陳明明) 중국 외교부 공공외교자문위원회 위원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먼저 시 주석의 방미 요청 사실을 발표하고 시 주석이 곧바로 이를 수락했다고 확인한 것은 정상외교 관행상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함.
- 중국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간 외교적 파격 행보는 새해 초부터 양국 지도자가 양국관계 개선이라는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 목표를 위해 분야별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함.

■ 미·중, 베이징서 고위급회담…‘사드’도 논의한 듯 (02/12, 연합뉴스)

-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에서 미·중 양국은 베이징(北京)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으며 양측이 사드 배치와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날 “사드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만큼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함.

■ “중국군, 부패·전문성 부족으로 전쟁승리 난망” (02/14, 연합뉴스)

-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랜드코퍼레이션은 12일 미국 의회의 미국·중국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의뢰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역량이 급격하게 개선됐지만, 만연한 부패와 전문 병력 부족, 훈련 부족 등 약점도 여전하다” 주장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3일 보도함.
- 랜드코퍼레이션은 부패 혐의로 낙마한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구권산 전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부장을 사례로 들며 “중국군은 자금 지출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외부 감시로부터 거의 완벽한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이어 “중국 해군과 공군은 복잡한 현대 무기와 여러 세대의 항공기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방위 산업은 견고한 독점 체제와 과도한 지출 문제에 직면했다”고 덧붙임.

- **美군비지출, 중국의 4배 이상···GDP 대비 지출은 北 세계1위 (02/1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4년 세계 군비지출·무기이전(WMEAT)’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1년 7천390억 달러(한화 약 813조1천억 원·실제 시장환율 기준)의 군비를 지출했으며 이는 2010년보다 510억 달러가 줄은 수치임.
 - 그러나 이는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2위인 중국(1천700억 달러·한화 약 187조 원)의 4.3배에 달하며 3위인 러시아(702억 달러·GDP에 구매력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1천180억 달러)에 비해서는 10.5배 수준으로 군비 지출규모는 여전히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한국은 235억 달러로 12위에 자리매김했고, 북한은 29억6천만 달러로 50위에 그쳐 절대적인 군비 규모는 크지 않지만 2011년 기준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군비 지출비중은 12.4~22.1%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함.

바. 미·일 관계

- **일본 외무성 “美교과서 군위안부 기술 중대한 사실오인” (02/09, 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 이토 다카코(伊藤恭子) 국제보도관은 10일 일본 정부는 맥그로힐 출판사와 그 교과서 집필자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지만 중대한 사실 오인과 일본의 입장과 양립되지 않는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함.
 - 미국 출판사 맥그로힐이 퍼내 로스앤젤레스 등의 공립 고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는 ‘전통과 교류’ 교과서에는 ‘일본군이 14~20세의 여성 약 20만 명을 위안소에서 일 시키기 위해 강제로 모집·징용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이에 대해 미국 역사협회 소속 역사학자 19명은 지난 5일(현지시간) 집단성명을 통해 “우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성 착취의 야만적 시스템 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함.
- **백악관 “아베 방미는 국민방문에 준한 ‘공식방문’” (02/09, 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와 관련해 “방문의 격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이라고 확인했다.

-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국가원수가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어서 애초부터 국민방문 초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은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를 국민방문에 준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치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짐.
- 외국정상의 방미 형식은 국민방문, 공식방문,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실무방문(Working Visit) 등으로 나뉘며 국민방문은 공항에서 의장대가 사열하는 환영행사, 백악관에서 21발의 예포를 쏘는 환영식과 환영 만찬, 미국 의회에서의 상·하원 합동연설 기회가 주어짐.

■ 방미 앞둔 아베 ‘과거사’ 부담…의회연설 때 입장표명 주목 (02/09,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잘못됐다며 조직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것이 외교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이르면 4월 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부담거리가 생긴 것으로 판단됨.
- 아베 정권이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에 압력을 가한 것은 단순히 사실왜곡 시도라는 차원을 넘어 미국이 가장 신성시하는 가치의 하나인 학술의 자유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미국 조야에 간단치 않은 파장을 낳고 있음.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국방예산 삭감의 흐름 속에서 일본이 더 큰 안보부담을 떠맡기를 희망하고 있는데다 TPP 협상의 조기 마무리를 위해 일본과 적절히 타협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 같은 과거사 압박이 ‘실리외교’ 앞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큼.

■ 미 전문가들 “미 의회, ‘과거사’로 아베 연설 환영안해” (02/13, 연합뉴스)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래리 닉쉬 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미 의회 정서상 과거사 문제로 인해 아베 총리가 나와 합동연설을 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며 아베 총리 역시 의회 내부의 비판론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과거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또한 의회 전문위원 출신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TPP 협상이 타결되고, 미·일 상호방위지침 개정이 마무리되며, 과거사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이 표명되기 전까지는 합동연설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함.

- “미·일, 전후 70년 맞아 동맹강화 공동문서 추진” (02/14, 연합뉴스)
 -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4월 말~5월 초 미국을 방문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차 대전 종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동맹 강화 구상을 보여주는 공동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현재 일본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서두르고 TPP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내용을 가시적 결과물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음.
 - 요미우리신문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패전일(8월 15일) 전후로 역사 인식을 내세워 일본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정부가 이에 선수를 치는 차원에서 미·일 동맹의 강화를 피하고 있다고 분석함.

사. 미·러 관계

- “오바마 러시아 승전 기념행사 참석 않을 것” <백악관> (02/09, 연합뉴스)
 - 백악관의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면서도 “미국은 나치 독일 분쇄에서 러시아가 한 역할에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은 이견이 공통의 역사의 중요한 의미를 약화시키진 않는다”고 강조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약 20개국 정상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요 서방국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와의 갈등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푸틴과 통화…“평화협정 거부하면 큰 대가” (02/1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서방 측과 협의 중인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러시아가 공격적 행동을 계속하고 군대와 무기, 자금을 동원해 분리주의 반군을 돕는다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강조함.

- 러시아 크렘린궁 공보실도 오바마와 푸틴 대통령 간 전화통화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힘.
- 아울러 공보실은 양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과 조속한 유혈 사태의 중단, 동남부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 지역 주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 보장 등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함.

■ 미국 언론 “우크라이나 2차 휴전협정 최대 승자는 푸틴” (02/14, 연합뉴스)

- 러시아·우크라이나·프랑스·독일 4개국 정상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반군 간 두 번째 휴전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가 가장 이득을 보게 됐다고 분석함.
- 분리주의 반군을 지원하는 러시아는 이번 협정 체결로 미국과 유럽의 추가 제재를 피할 여지를 갖게 됐으며 미국이 휴전을 촉구하며 카드로 꺼내 든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무기 공급 가능성도 차단하게 되었음.
- 아울러 러시아는 이와 함께 합의안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부 반군 지역에 그동안 끊겼던 사회·경제 연결망을 복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반군 지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되었음.

아. 중·일 관계

■ 주일 중국대사 “일본, ‘역사 반성’ 약속 지켜야” (02/13, 연합뉴스)

- 청융화(程永華) 주일본 중국대사는 도쿄도(東京都)의 한 호텔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12일 “일본이 전후 70년을 계기로 역사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 역사를 반성한다는 약속을 지키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함.
- 청 대사의 발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해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서 침략과 식민지배로 아시아 국가 등에 피해를 줬다며 사죄의 뜻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관한 우려·경고의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됨.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시정연설 내용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우리는 일본이 오직 진정으로 과거를 대할 때만이 진정한 미래가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다”고 전함.

■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일본기업 화해 협의 중단 (02/12, 연합뉴스)

- 전쟁 중 강제로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 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 교섭이 중단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과 도쿄신문이 보도함.
- 원고 측 변호사는 미쓰비시머티리얼이 강제연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양측이 주고받을 것을 논의한 금전을 배상의 일환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결렬 이유를 밝힘.
- 원고들은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양보하는 경우 협의를 재개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협의가 최종 결렬되는 경우 법원이 판결을 위해 심리를 재개할지가 관건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함.

자. 중·러 관계

■ “김정은 러시아 먼저 방문해도 러-중 관계 문제없어” <러 대사> (02/09, 연합뉴스)

-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논리적이며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한반도 핵문제를 다룰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라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는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할 뿐 아니라 회담 재개를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김정은이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더라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지만 내심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우선 방문 가능성에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러시아, 두만강 하구 접경지 경제 협력 박차 (02/11,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린(吉林)성 훈춘(琿春)과 러시아 연해주 자루비노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러 초국경 경제합작구’ 건설이 올해 양국 정부간 전략적 협력사업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보도함.
 - 초국경 경제합작구는 러시아 극동 지역 항만과 중·러 철도망을 연계해 중국에 ‘동해 진출 루트’를 제공하고 양국이 협력해 접경 지역 일대를 가공무역과 국제물류 중심지로 구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지난 수년간 ‘항구를 빌려 동해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온 중국 당국은 애초 나진항, 청진항 등 북한의 동북 지역 항만을 활용하는 데 큰 관심을 보였으나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자 러시아 극동 지역 항만들을 이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차. 일·러 관계

- 일본-러시아 차관급 협의…푸틴 연내 방일 환경정비 (02/12, 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가 1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외무차관급 협의를 개최하여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의 영유권 협상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함.
 -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 심의관(차관보)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쿠릴 4개섬 문제 이외에도 2014년에 진행하려다 미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올해 안에 실현하기 위한 환경정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짐.
 - 양국의 차관급 회담은 작년 1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당초 작년 8월 개최예정이었지만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대(對) 러시아 추가 제재를 발동한 것에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연기되었음.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조평통 "남한, 미국 추종하면 보복타격 대상"(2/11,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남한이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에 동조하면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음.
 - 이번 성명은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성명에서는 북한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남측이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봉기를 노린 곡제적 공조 놀음에 계속 매달린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과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北,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 "南괴뢰패당은 인권유린 왕초"(2/12, 뉴시스)
 - 북한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12일 오후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극도의 통치위기에 몰린 괴뢰패당이 파쇼 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해보려고 보안법 개악과 진보민주세력 말살 책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음.
 - 협회는 "이 파쇼 악법에 의해 지금 남조선에서는 합법적인 정당이 하루아침에 강제해산되고 국회의원에게까지 백주에 쇠고랑이 채워지는가 하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적 단체들의 합법적 지위가 박탈되고 인터넷신문 자주민보와 같은 진보언론들이 가혹한 탄압의 희생물로 되고 있다"고 소개했음.
 - 또 "그 주제에 입만 벌리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벌이는 것은 철면피의 극치"라며 "괴뢰패당은 인권이란 말을 입에 담을 체면도 없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러 파견 북한 벌목공, 안전장치 없이 강추위 중노동"(2/12, 연합뉴스)
 - 북한인권단체 엔케이워치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 해외파견 근로자 인권피해 실태 유엔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에는 해외파견

노동자 출신 탈북자들이 참석해 그들이 겪은 인권유린 실태를 증언했음.

- 2000년부터 3년여 간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일한 김모 씨는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쉬 없이 일했음.
- 그는 현지의 다른 외국 노동자보다 5배 정도 적은 임금을 받고 일했다고 증언하고 임금의 대부분은 당 간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는 당 간부에게 잘 보여야 했고 결국 뇌물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고 그는 전했다.

■ “북 언론탄압 강화 속 정보 유통 증가”(2/12,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12일 발표한 2015년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에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180개 국가 중 179위로 언론 탄압이 심각한 곳으로 꼽혔음.
- 벤자민 이스마일(Benjamin Ismail) 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은 기본적으로 북한 당국의 언론탄압 상황엔 변화가 없고 여전히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북한 당국이 언론과 정보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고 오히려 김정은 정권 들어서 더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 내부에서의 정보 유통, 또 북한 내외로 정보가 유입되고 유출되는 상황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스마일 담당관은 북한 내에도 AP와 신화, 이타르타스 통신 등 일부 외신들이 들어가 있지만 언론사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음.
- 북한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독립 언론이 생길 필요가 있다며 북한 내 언론의 자유는 북한 주민 뿐 아니라 북한 당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북한, 인도네시아에 북한인권 심포지엄 항의(2/14,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대해 북한이 인도네시아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인도네시아 주간지 '템포' 인터넷판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행사와 관련해 현지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항의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음.
- 대변인은 북한의 항의 서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는 민주국가로서 이미

- 법적 승인을 받은 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 국가인권위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음.
 - 인도네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인도네시아가 유엔뿐 아니라 아세안과 같은 다른 국제무대에서도 인권 원리를 옹호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 템포는 리정렬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항의 서한과는 별도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북한을 반대하는 집회의 개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북측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리 대사가 국제심포지엄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 취재진 앞에서 항의문을 낭독했다고 보도했음.

2. 북한 인권

- 인권단체, 유엔에 북한 해외노동 실태조사 요청(2/9, 연합뉴스)
 - 북한 인권단체 NK위치는 9일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NK위치는 지난해부터 해외근로자 출신 탈북자를 심층 인터뷰해 만든 총 13건의 청원서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현대판 노예제도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계획임.
 - 아울러 특별보고관이 북한에서 나온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방침임.
- '북한인권통' 내주 워싱턴 총집결...유엔 北인권보고서 1주년(2/10, 연합뉴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1주년을 맞아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과 한·미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 총집결함.
 - 이는 최근 북한이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 번복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공세에 맞서는 대대적 반격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음.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북한인권위원회(HRNK),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기념재단, 한국 연세대는 오는 17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인권: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9일 전했다.
- 토론회에는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주도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참석함.
- 커비 전 위원장과 다루스만 보고관은 최근 신동혁 씨의 증언 반복에도 북한의 인권유린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다각적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 인권위, 자카르타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2/12, 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오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과학원·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아세안정부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부와 공동으로 '2015 북한인권 개선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시아 지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음.
- 현병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인권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기준과 가치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북한인권 개선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어 "이번 심포지엄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아세안 지역의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포괄적인 지역적 접근방식으로 아시아 지역 차원의 인권기구 설립 또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음.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최근 국제사회가 이루어 낸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금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다음달 3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충격적인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제사회에 재차 알리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종결과 책임자의

법적 처벌을 거듭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 출범...23일 결의안 호주 국회서 표결(2/12, 연합뉴스)
 - 북한인권개선 호주운동본부(NKHRAAA)가 12일(현지시간) 출범했음.
 - 이 단체의 김태현 대표는 이날 주시드니총영사관(총영사 이휘진)에서 거행된 출범식에서 "수일내 호주 연방국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총영사는 격려사에서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호주 시드니에서 북한인권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일이 통일을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호주운동본부 자문위원인 크레이그 룬디 호주 하원의원은 16일 하원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표결은 오는 23일 실시됨.
- 탈북자단체들,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 촉구(2/12, 연합뉴스)
 - 국내 탈북자단체로 구성된 '탈북자단체연합'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에 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음.
 - 이 단체는 최근 일부 탈북자의 증언 오류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증거는 이미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법 제정의 반대 논리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미국 "남북대화, 북한 비핵화에 도움"...엠네스티 북한인권 기록영화 공개(2/15, 미국의 소리)
 -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록영화 '또 다른 인터뷰'를 제작해 공개했음.
 - 영화 '또 다른 인터뷰'는 탈북자 박지현 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록영화로, 박 씨의 증언을 담은 15분 분량의 이 기록영화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인터넷 웹사이트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공개됨.

3. 탈북자

- 국내 입국 탈북자 수 3년간 절반 급감(2/9, 연합뉴스)
 -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 규모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3년 내내 과거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9일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1천396명(잠정집계)으로 2011년 2천706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음.
 -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국내 정착 탈북자 수는 2009년 2천914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탈북자 수가 큰 폭으로 줄기 시작해 2012~2013년에는 한해 당 1천500명 선을 이어왔음.
 - 이런 추세는 포전담당제 등 시장경제 요소의 확대 도입으로 경제사정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나아지면서 생활고로 인한 탈북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 최신호는 최근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경제개선 조치들을 잇달아 시행하며 국제사회 제재국면에서도 경제 사정이 나아졌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북한 당국이 김정은 체제 이후 러시아 등 주변국과 공조를 통해 탈북 주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옴.
- 탈북청소년 66% 4년제 대학 졸업 바라다(2/9, 아시아경제)
 - 탈북 청소년의 3분의 2 이상이 최종학력으로 4년제 대학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9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옥임)이 2013년 12월 말까지 입국한 탈북청소년 1964명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 청소년은 초등학교 41.5%, 중학교 35.1%, 고등학교 14.8%의 재학률을 보였음.
 - 적령기에 맞게 재학하는 비율은 초등학교는 96.1%, 중학교 70.9%, 고등학교 51.9%로 나타나 학령기보다 낮은 학교에 재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재단 측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절반에 이르는 학령초과자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음.

- 탈북 청소년의 최종희망 학력으로는 66.4%가 4년제 대학교를 희망했고 20.5%는 석박사를 희망했으나 전문대(2년제나 3년제)를 희망한 비율은 단 6.6%에 그쳤음.
- 이는 남한 청소년의 58.9%가 4년제 대학을, 24.2%가 대학원 학력을, 13.1%가 전문대학을 희망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또 재단이 2013년 12월 말까지 입국한 만 15세 이상의 탈북자 1만277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석 달간 벌인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탈북자의 72.3%는 남한의 학교에 다닌 적이 없으나 15.4%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고 9.7%는 과거에 다닌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남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15세 이상 탈북자 1968명은 일반대학교가 3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학교(19.6%), 전문대학교(16%), 대학원(3.6%)의 순으로 약 70%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탈북자 60% “대북송금 경험 있다”...북한에서 역송금받은 사례도(2/10, 헤럴드 경제)

-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59.0%가 북한으로 돈을 보낸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
-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NK Social Research’가 10일 발간한 ‘2014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에 따르면, 대북 송금여부에 대해 ‘송금한 적 있음’이라고 답변한 북한이탈주민은 59.0%에 달했음.
- 이들 가운데 지난해 대북송금 금액은 100만원 이하 31.1%, 101~200만원 이하 36.3%, 201~300만원 이하 16.4%, 300만원 초과 16.3%로 대개의 경우 2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01만원 이상을 보냈다는 응답도 5.1%에 달했음.
- 대북송금 브로커 등에게 지급하는 송금수수료와 관련해서는 ‘21~30%’라는 답변이 71.2%로 가장 많았으며 ‘20%이하’라는 답변이 15.1%로 뒤를 이었으나 ‘31% 이상’이라며 고액의 송금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경우도 9.0%에 달했음.
- 특히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오히려 송금을 받은 역송금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 400명 가운데 1.3%인 5명은 중국(4명)과 북한(1명)으로부터 송금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음.

- **지난달 탈북난민 1명 미국 입국..2006년 이후 179명(2/10, 미국의 소리)**
 - 미국 국무부는 9일 발표한 ‘난민입국 현황자료’에서 지난달에 탈북자 1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음.
 - 이로써 2006년 이후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백7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여성이 70~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년도 별로 보면 지난 2008년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에는 14명으로 가장 적었음.

- **스웨덴 법원, 탈북 주장 소년 강제추방 잠정 중단(2/11, 미국의 소리)**
 - 스웨덴 법원이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소년에 대해 강제추방 절차를 잠정 중단시켰음.
 - 이 소년이 강제 복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을 것이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검토의사를 밝힌 것임.
 - 자신을 탈북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년을 변호하고 있는 아리도 드가브로 씨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스웨덴 법원이 이 소년에 대한 강제추방 절차를 잠정 중단시켰다고 밝혔음.
 - 드가브로 씨는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소년이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인권탄압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 이민국이 이 소년을 중국 조선족으로 판정하고 추방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실제 추방 조치를 집행하는 데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굳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함.
 - 스웨덴 이민국이 소년이 탈북자가 아니라 중국 조선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방 결정을 내린데 대해 변호인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지난달 새로운 증거자료와 면접 조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항소를 다시 제기했음.
 - 스웨덴 이민국은 현재 계류중인 항소를 이민법원이 기각할 경우 이 소년을 강제로 돌려보낼 제3국, 즉 중국에 국적 확인을 요청한다는 입장임.
 - 드가브로 씨는 법원이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달 안에 판결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음.

4. 이산가족

- 정부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물리적으로 힘들어"(29, 연합뉴스)
 - 정부는 9일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산가족의 염원을 고려해서 설 이후에라도 이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북한이 우리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 중 남북대화를 제안하면서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는 등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북측에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5. 납북자

- 북한-일본 중국 상하이에서 납북자 문제 비공개 협의(2/13, 중앙일보)
 -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비공식 협의를 열어 일본인 납치문제를 논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 요미우리과 교토통신 등이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과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비공식 협의를 했다고 함.
 - 양국 간 납치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협의 이후 처음임.
 - 그러나 이번 접촉에 나선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북한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전했다.
 - 지난달 협의에서 일본 대표단은 북측에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안부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지만 북한 측이 새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함.
 - 일본은 북측에 납치문제를 재조사한 결과 보고를 빠른 시일내에 요청하기도 했다.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납치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조사를 실시해 빠르고 정직하게 일본 측에 통보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WFP, 5월 새 대북식량사업 논의(2/12,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번 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을 포함한 2015년 하반기 이후의 지역별 식량지원 계획을 검토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본부인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올해 첫 정기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와 2015년 하반기 이후의 지원사업을 검토했음.
 - 이번 이사회에서는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식량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검토됐을 뿐, 북한 관련 지원 사업은 논의되지 않았음.
 - 북한 문제가 이사회에 상정된 국가별 안건에 정식 포함되진 않았지만, 오는 5월에 열릴 정기 이사회에서 2015년 하반기 지원 사업 등 대북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될 전망이다.
 -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전직 요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의 대북식량지원사업이 오는 6월 말을 기한으로 진행 중이지만, 북한이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오는 5월 이사회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새로운 식량지원 사업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음.
 - 이와 관련해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가 지난 3일 공개한 ‘북한의 식량 수요·공급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북한에서 생산될 곡물이 소비될 곡물에서 약41만 톤 부족하며 북한 당국이 수입으로 충당할 30만 톤을 제외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곡물 규모를 약 10만 7천 톤으로 추정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오는 6월까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180만 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약 7만 톤 규모의 영양강화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하지만 국제사회의 모금부진으로 세계식량계획의 혜택을 받는 북한 주민의 수는 지원 대상의 삼분의 일에서 절반 수준에 그침.

- “북, 드레스덴 선언 후 대북지원품 거부”(2/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지난 11일 남한의 분유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남한 통일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남한의 대한적십자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분유 25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지만, 북한 당국의 거부로 무산됐음.
 - 대한적십자사가 분유를 보내겠다고 한 것은 지난 11일로, 통지문은 관문점을 통해 전달했음.
 - 그러나 북한은 대한적십자사의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았고, 지원을 거부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음.
 -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이 분유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통지문 자체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임.
 -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분유 지원이 북측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만 표출이라는 시각이 많음.
 -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통일대박’을 얘기하고,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한 이후 북한은 남한에서 보내는 지원물품을 거의 받지 않고 있음.

8. 북한동향

- 北,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한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북 인권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려고 새해 벽두부터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2/1, 중앙방송)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